

---

# 어문 규정 폐지를 통한 어문 규범의 현실화 정책을 펼 때

신지영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 1. 복수 표준어 확대 정책을 환영하며

국립국어원은 2011년 8월 31일 ‘짜장면’을 포함한 모두 39개 항목을 기존의 표준 어형과 함께 복수 표준어로 인정했다. 국립국어원의 이날 조치에 대해 국민들은 그야말로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짜장면’이 표준어가 되었음을 알리는 뉴스가 여러 매체를 통해 하루 종일 보도되었음은 물론, ‘짜장면’은 이날 모 포털 사이트의 인기 검색어 9위에 오르기도 하였다. 또 일부 유명인들은 소위 ‘짜장면 인증샷’을 찍어 전하면서 ‘짜장면’이 드디어 ‘짜장면’으로 불릴 수 있게 되었음을 축하하였다. 혹자는 이날을 ‘짜장면 복권(復權)의 날’이라고 칭하기도 하였다.

‘짜장면’은 그간 비현실적인 어문 규범에 대한 저항과 조롱의 상징 역할을 해 왔다. 심지어 모 방송국에서는 ‘자장면’의 비현실성을 고발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방영하기까지 하였다. 아무도 ‘자장면’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자장면’이라고 적고 ‘자장면’이라고 발음해야만 규범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니, 규범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선이 고을 수만은 없었다. 어문 규범은 현실과 괴리가 클수록 규범으로서의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럼 ‘자장면’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도 ‘자장면’만이 그렇게 오랫동안 표준어로 인정되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왜 그렇게도 어문 규범의 비현실성을 줄이기가 어려운지를 알게 될 것이다.

## 2. ‘짜장면’이 그간 비표준어였던 이유

그동안 ‘자장면’만이 표준어로 인정되었던, 그래서 ‘자장면’이라고 쓰고 ‘자장면’이라고 말해야만 규범에 맞았던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문화된 ‘어문 규정’ 때문이었다. 이 단어는 중국어에서 온 외래어 ‘炸醬’에 한자어 ‘면(麵)’이 붙어서 된 말이다. 따라서 ‘면’ 앞에 있는 외래어 ‘炸醬’은 어문 규정 중에서 ‘외래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 ‘炸醬’의 중국 발음은 [zhajiang]이므로, 이 단어는 외래어 표기법 제2장에 규정된 한어 병음 자모 대응 원칙에 따라서 ‘자장’으로 표기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렇게 표기된 ‘자장’은 또 다른 어문 규정인 ‘표준어 규정’ 제2부 표준 발음법에 따라서 [자장]으로 발음되어야 한다. 표준 발음법에는 한글로 ‘ㅈ’으로 적힌 단어의 발음은 표준 발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 무조건 [ㅈ]로 발음해야 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요약하면 ‘자장면’이 ‘자장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글(표기)의 규범과 말(발음)의 규범이 각각 ‘외래어 표기법’과 ‘표준 발음법’과 같은 성문화된 어문 규정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장면’의 비현실성을 뺀히 알면서도 ‘짜장면’을 ‘자장면’으로 인정하기가 매우 곤란했던 것이다.

어문 규정이 존재하는 한, 어문 규범의 현실화를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하나는 규정을 바꾸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을 규정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다. 규정을 바꾸는 것도, 규정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도 규정의 권위

를 약화시키게 된다. 어문 규범이 성문화된 규정으로 존재하는 한, 규정의 권위는 곧 규범의 권위가 된다. 따라서 규정의 권위가 약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규범의 권위가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어문 규범을 여러 조항으로 구성된 ‘어문 규정’을 통해 세우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어문 규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북조선인민공화국, 딱 두 나라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3. 어문 규정을 갖게 된 배경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성문화된 어문 규정을 갖게 되었을까? 우리가 처음으로 성문화된 어문 규정을 갖게 된 것은 1933년의 일이다. 국어사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통일된 표기형이 필요했고, 통일된 표기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표기법의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표기법의 원칙을 정한 것이 바로 1933년 제정·공표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었다.

표기법의 원칙을 세우던 시기에는 철자법의 원칙을 적어 놓은 어문 규정이 필요했다. 철자법의 일반적인 원칙을 고안한 후에, 이를 규정으로 만들면 그 규정을 바탕으로 다른 단어들의 표기형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유추된 표기형은 사전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표제어의 표기법을 정할 수 있게 해 주었고, 사전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표제어의 표기형을 유추하여 찾을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럼 표준 사전인 《표준국어대사전》이 간행된 1999년 이후의 상황은 어떤가? 우리에게 여전히 성문화된 어문 규범, 즉 어문 규정이 필요한가? 아니면 어문 규정은 유통 기한이 만료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야 할 때가 온 것인가?

표준화된 사전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동시에 표기법이나 발음법의 원

칙을 적어 둔 성문화된 어문 규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어문 규범은 사전을 중심으로 충분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을 찾아 사전에 나온 대로 표기하고 발음하는 것이 규범을 따르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전 중심 방법은 우리에게 그리 낯선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영어를 배울 때 철자법의 원칙이나 발음법의 원칙을 규정을 통해 배우지 않고 사전을 통해 배웠다. 영어의 경우는 사전에 있는 대로의 표기법과 발음법을 따르는 것이 어문 규범을 지키는 일이다.

#### 4. 바꿀 것인가, 없앨 것인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금처럼 어문 규정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태에서 어문 규범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어문 규정을 개정하거나 해당 규정에 예외를 인정해야만 한다. 하지만 어문 규정이 규범으로서의 권위를 가지려면 자꾸 개정이 되어서도 안 되고,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예외를 너무 많이 인정해서도 안 된다.

결국 지금처럼 어문 규정을 어문 규범의 근거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문 규범을 현실화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어문 규정의 유통 기한이 만료된 만큼, 우리가 어문 규정을 계속 유지해야 할 이유는 없다. 말과 글의 규범을 성문화된 몇 개의 조항으로 모두 규정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그 자체가 애초부터 비현실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문 규범의 현실화는 어문 규정을 바꿈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문 규정을 없앴으로써 이루어진다. 어문 규정이 없어지게 되면 어문 규범의 현실화가 사회적 합의를 이룬 표기형이나 발음형을 개별적으로 사전에 올리는 과정을 통해 단순히 얻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표기형과 발음형이 각각 '돈가스'와 [돈가스]인 단어

를 생각해 보자. 이 단어의 현실적인 발음은 [돈까쓰]이고, 사람들의 일반적인 표기형은 '돈까스'이다. 하지만 현재의 어문 규정이 존재하는 한, '돈까스' 이외의 표기형을 규범으로 정하기 어렵다. 또 '돈까스'를 표기 규범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돈까스]라는 발음 이외의 다른 발음을 규범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어문 규정이 존재하는 한,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표기형이나 발음형은 규범이 될 수 없다.

그럼 '짜장면'처럼 '돈까스' 혹은 '돈까쓰'도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는 방법을 택하면 어떨까? 그런데 '돈까스' 혹은 '돈까쓰'를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면 다른 외래어 '가스', '버스', '센터', '골' 등등 많은 외래어들도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복수 표준어 인정은 한 단어의 표준 표기형을 복수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표준 표기법의 원칙에 어긋나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니다. 또한 이렇게 예외가 많다면 애초부터 왜 그러한 비현실적인 표기법을 만드는 규정이 필요한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규정의 개정을 자연스럽게 요구하게 된다.

## 5.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규정' 중심에서 '사전' 중심으로

국민들이 이번 '짜장면 조치'를 반가워하는 이유는 언어 사용자가 규범의 주인임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규범은 언어 사용자가 따라야 하는 기준이지만, 규범을 만드는 주체는 분명히 언어 사용자들이어야 한다. 규범이 변한다면 그것은 언어 사용자들의 언어 사용이 변화하기 때문이지,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물론 규정이 바뀌는 것도 변화하는 언어 사용 양상을 반영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규정의 개정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규정의 개정은 어휘

의 개별적인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규정의 대상이 되는 단어 중 일부는 그 규정을 따르고, 일부는 그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를 규정으로 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어문 규정을 없애고 어문 규범을 사전 중심으로 세운다면, 어문 규범의 현실화를 단어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앞에서 봤던 ‘돈까스’의 현실화는 현실적인 표기형 ‘돈까스’를 사전 표제어에 올리고, 이에 대해 [돈까쓰]라는 발음형을 올리는 것이다. 어문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외래어에서 폐쇄음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경음을 쓰지 않는다는 외래어 표기법 규정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글자대로 발음해야 한다는 표준 발음법 규정을 따를 필요도 없다.

언어 사용자들을 무시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어문 규범은 언어 사용자들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언어 사용자들이 어문 규범을 지킬 수 있게 하려면 어문 규범이 언어 사용자의 언어 현실을 잘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어문 규범을 세우는 방향은 ‘관’이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을 통해 ‘민’의 어문 규범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방향이 아니라, ‘민’의 언어 현실이 ‘관’에 의해 잘 정리되어 ‘민’이 따를 수 있는 어문 규범을 ‘관’이 정립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